

시군자치구의원정당공천폐지등을위한결의문채택의견

의안 번호	제242호
----------	-------

발의연월일 : 2005. 8. 22.

발 의 자 : 이덕규 의원외 12인

□ 주 문

- 기초지방의원 정당공천제 허용은 풀뿌리 민주주의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며, 지방분권화 시대의 자율적 생활자치를 위협하고, 중앙정치 예측구조를 심화시켜 주민들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제한하여 결국 지방자치를 파행으로 이끌어 갈 것이 자명하므로
- 기초지방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반대하며, 「공직선거법」을 즉시 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함.

□ 제안이유

- 지방자치가 다시 시작 된지 14년이 지난 지금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의 촉진, 주민의식 향상 등 직접적인 효과에 대해 모든 국민이 몸소 체험하고 있음.
- 기초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가 도입되면 공천을 위한 정당 출서기와 새로운 인물의 등장을 차단하는 등 역효과가 발생하여 지방자치가 더욱 파행적으로 이끌어 갈 것이 자명함.
- 정당공천제는 풀뿌리 민주주의시대에 역행하는 것이고, 지방분권화시대의 자율적 생활자치를 위협하고, 중앙정치 예측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지역의 공직 후보자 선출에 대한 모든 제도적 선택권을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것으로 정당공천제를 반대하며,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결의하고 관계기관에 건의코자 함.

시군자치구의원정당공천폐지등을위한결의문

지난 6. 30 국회는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허용, 정수 20% 감축, 중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키로 했다.

법률의 개정은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지방선거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취지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활동시한에 쫓겨 이해당사자는 물론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생략한 채 국민을 속이고 정치적 야합에 의해 일방적으로 공천제 등을 도입키로 의결했다.

이는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온 국민의 이름으로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며, 예산군의회 의원 모두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라.

1.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중선거구제를 폐지하라.

1.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정수의 축소를 최소화하라.

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민을 속이고 입법권을 남용한 국회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2005년 8월 29일

충남 예산군의회 의원 일동

의 장	이회운	부의장	권국상	의 원	조기덕
의 원	신영균	의 원	김승기	의 원	이석원
의 원	강연종	의 원	전태수	의 원	이한두
의 원	이덕규	의 원	이민복	의 원	이만우
의 원	김동숙				